



RICON

건설 BRIEF

건 설 브 리 프

정책동향

-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9. 16 입법예고” 업종체계 개편 본격화, 국토교통부
-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가 예고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정책 방향
 - ICT·융복합 기술의 적극적 활용과 젊은 세대의 터전 확보를 위한 지방 균형 발전이 중요
- 2019년 건설업조사 결과 요약
 - 해외건설 실적 악화에 건설 성장을 정체, 늘어나는 업체에 과당경쟁과 수익악화 우려

산업동향

- 3기 신도시 추진 현황과 사전 청약

정부 및 업계 동향

정책동향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9. 16 입법예고” 업종체계 개편 본격화, 국토교통부

박승국 연구실장
(skpark@ricon.re.kr)

업종체계 개편 분야별 세부 시행 방안

① 종합-전문업체 간 공정경쟁을 위한 업종 통폐합

- 현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발주자 편의성, 현실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22년부터 14개로 통합
-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범위를 확대해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로 전환될 것임
- '22.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공공공사는 '22년부터, 민간공사는 '23년부터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
 - '21년에는 발주 가이드라인 및 입찰기준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위해 국토부 산하기관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계획
 - 토목, 건축 분야 대업종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시행 공사 중 20개 내외 선정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적용 추진일정

	'21. 1	'22. 1	'23. 1	'24. 1
업역규제 폐지	공공 공사	공공 + 민간 공사	공공 + 민간 공사	공공 + 민간 공사
대업종 의무 적용		시행	공공 공사	공공 + 민간 공사
공사발주	(공공) 현행업종 (민간) 현행업종	(공공) 대업종 (민간) 대업종 또는 현행업종	(공공) 대업종 (민간) 대업종	(공공) 대업종 (민간) 대업종

- (예시) 종전 토공업을 영위하던 A업체가 '22년부터 지반조성·포장공사사업으로 전환 시
 - ('22) 공공공사는 지반조성·포장 공사사업으로 발주되어 입찰참가 가능하며, 민간공사는 토공업으로 발주하더라도 종전의 토공업 자격으로 입찰참가 가능
 - ('23~) 공공공사·민간공사 모두 대업종 기준으로 발주 및 입찰 참가

② 발주자 편익 강화를 위한 주력분야 제도 도입 * 현 28개로 운영 후, '22년부터 추가 세분화 방침

- 건설공사 소비자인 발주자가 생산자인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하여 업체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
- 전문업체는 '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되고, '22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 시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음
- 제도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지만, '21년 연구용역을 거쳐 '22년부터 추가 세분화 계획

③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확보를 위한 유지보수 시장 전문성 강화(건산법 및 건산법 시행령 개정)

- 2038년이 되면 30년 이상 대규모 SOC(1종·2종) 시설의 비중이 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지보수 분야에 특화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유지보수공사를 신설
- 유지보수 공사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1년부터는 신축 공사실적과 구분하여 유지보수의 세부공종별 실적 관리
- '복합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업종 전환
 -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2년부터 '23년까지 전문건설 대업종(통합 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24.1월부터는 전문 대업종 1개로 자동전환
- (전문건설업 전환)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은 유지보수와 관련 있는 6개 전문 대업종 중 3개 업종을 선택하여 전환하고, 업종 내 주력분야도 모두 취득 가능
 - 6개 전문 대업종: ①지반조성·포장공사업, ②실내건축공사업, ③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④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⑤철근·콘크리트 공사업, ⑥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 업종 전환 과정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 전환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6년 말까지 면제
- (종합건설업 전환) 종합건설업종으로 전환은 건축 또는 토목업으로 전환하며, 업종 전환 시 기술자·자본금 요건은 전문과 동일하게 '26년 말까지 면제
- 시설물 업체가 조기에 대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시점에 따라 차등화하여 종전 유지보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게 되고, '23년 말까지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 지위(입찰 참가자격)도 인정받게 됨

④ 업종개편 과정에서 영세 사업자 보호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 도입

-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종 전환 과정에서 영세업체에 대한 보호 강화
-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시평 일정금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도급제한)를 도입하고, 영세업체에게는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9년 말까지 3년 추가 면제하는 방안 추진
- 영세업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의 범위는 추후 업계·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된 이후 '21년 초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할 계획

정책동향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가 예고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방향

- ICT·융복합 기술의 적극적 활용과 젊은 세대의 터전 확보를 위한 지방 균형 발전이 중요-

조재용 선임연구원

(adelid83@ricon.re.kr)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가 예고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방향

①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가 예고된 우리나라

- 우리나라는 지속된 저출산·고령화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 합계출산율은 38년째 인구대체율(21명)을 하회하고 있고, 최근에는 1이하를 기록하며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 가속화가 결합되어 '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진행 중임
 - 금년 상반기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인 143만 명이며, 코로나 19가 결혼·출산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는 인구감소가 발생하는 첫 번째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 장래인구특별추계('193월, 통계청)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2067년에는 4,000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18년 3,765만 명에서 지속 감소하여 2067년에는 절반 이하인 1,784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총부양비도 향후 50여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하여 2067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임
- 인구감소 및 고령화는 '20년대부터 잠재성장률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음
- 이에 정부는 최근 가속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미래에 닥칠 충격을 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년)을 마련하여 연내 발표할 계획이며, 우선 8월에 인구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발표함

② 해외 주요국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 독일¹⁾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가이며, 2013년 65세 이상 인구는 211%에 달함 독일의 출산율은 139명 수준이며, 8200만 명인 독일 인구가 2060년에는 6500~70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
 - 독일은 과거 초청 노동자 제도를 만들어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다가 문화적 갈등이 극심해진 탓에 2000년 초반 이민 정책을 포기하고, 고급인력 이민 유도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전환
 - 독일 정부는 인구 감소를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리고, 질적 성장에 주목함 노동력 감소를 노동자 교육 강화, 기술개발과 설비 투자, 고령화 일자리 확보의 기회로 판단
 -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독일은 공장 자동화 공정에 IT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적인 생산시스템을 확보하여 더 적은 숙련 기술자가 더 많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함
- 일본 정부²⁾는 2008년 1억 2808만 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인구가 앞으로 100년 후에 19세기 수준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 2014년 9월, '거리·사람·일자리 창생법'이 제정되고, 2014년 12월에는 2060년에 1억 명을 유지하기 위한 중장기 전망을 나타낸 '거리·사람·일자리 창생장기비전'을 수립하며, '제1기 종합전략'(2014), '제2기 종합전략'(2019)'을 수립하였음
 - '종합전략'에서는 ㉠ 관광업 및 농림수산업 육성을 통한 지방의 일자리 확보 ㉡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 ㉢ 젊은 세대의 결혼, 출산, 육아 지원 ㉣ 콤팩트 시티 ㉤ 여성,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인재가 활약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 ㉥ 미래 기술을 활용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 제시됨
 - 2015년 분산된 저출산 정책과 관련된 부서들을 통합하여 '1억 총활약담당장관'을 신설하고, 출산율 18명을 달성하기 위한 대응을 지시함

③ 인구구조 대응 방향과 건설업의 준비

- 독일의 사례와 같이 쉽게 외국인 노동력을 유입시키는 것보다, 다양한 ICT 기술·융복합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인 근로자로 충분하도록 필요 근로자 수를 감소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작업 효율을 높여 근로 시간을 줄이고도 충분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함
- 일본 사례와 같이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젊은 세대의 터전 확보가 용이한 환경을 갖추는 것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를 25세로 가정한다면, 현재 2020년에는 25세 남자가 388만 명인데 비해, 20년 뒤인 2040년에는 22만 명으로, 약 45%가 감소하게 됨 이렇게 사회로 진출하는 새로운 청년층이 감소하는 가운데 사회에서 여전히 3D업종으로 인식되어 지고 있는 건설업의 입장을 생각하면, 2040년에는 건설업으로 진입하는 청년층의 숫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됨 물론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이며, 건설업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는 다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1) 조용탁(2015), 독일에서 배우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 해법, 이코노미스트 2015년 1월 5일 1268호

2) 内閣官房(2019), 第2期「まち・ひと・しごと創生総合戦略」

정책동향

2019년 건설업조사 결과 요약

- 해외건설 실적 악화에 건설 성장률 정체, 늘어나는 업체에 과당경쟁과 수익악화 우려 -

김태준 책임연구원
(tjkim@ricon.re.kr)

2019년 건설공사액: 해외공사 실적의 급격한 하락, 국내 건축공종 하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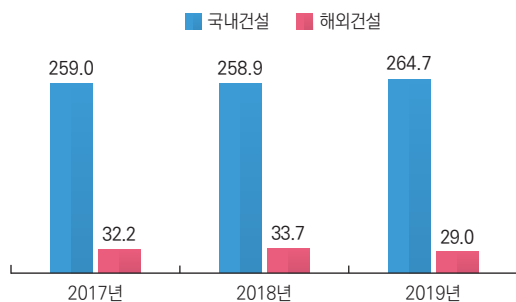
① 정부공사액(기성액)은 293.7조원으로 국내건설 공사액은 2.2% 증가 해외건설 공사액은 13.9% 하락

- 지난 8월 27일 2019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치)가 발표되었으며, 기성액은 293.7조원으로 집계됨
- 2019년 건설공사액은 전년대비 0.4%인 1,116억원 증가하였으나, 물가상승률(0.4%) 감안 시 정체수준
- 국내건설은 전년대비 2.2% 상승한 반면, 해외건설은 13.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국내건설 공사액은 264.7조원으로 전년대비 2.2%인 5.8조원이 증가
 - 해외건설 공사액은 29조원으로 전년대비 -13.9%인 -4.7조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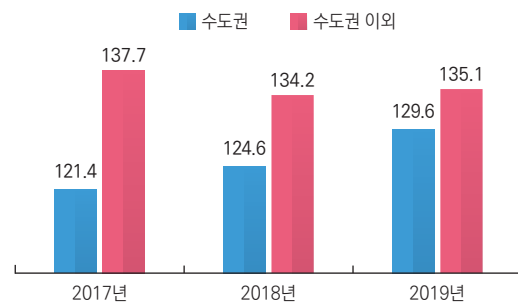
② 국내 공사액 중 수도권 공사액은 3.9% 증가 수도권 이외 공사액은 0.7% 증가

- 수도권 공사액은 129.6조원으로 전년대비 3.9%인 4.9조원 증가
- 수도권 이외 공사액은 135.1조원으로 전년대비 0.7%인 0.9조원 증가
- 지자체별 상승률 상위 3지역은 전남(25.5%), 대전(18.6%), 대구(13.9%)가 10%대 이상 상승
- 지자체별 하락률 상위 3지역은 울산(-21.5%), 경남(-9.8%), 충북(-8.9%)이며, 이외에 제주, 세종, 경북, 충남도 공사액 감소

국내 / 해외 공사액 추이



수도권 / 수도권 이외 공사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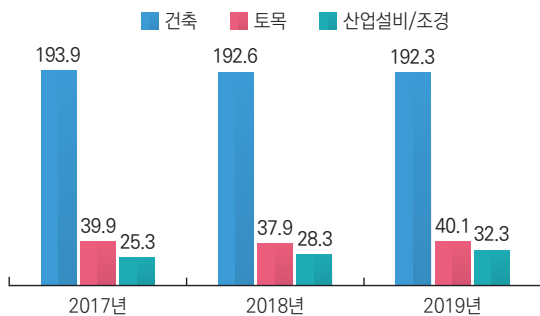


(단위: 조원)

③ **건축공종 및 종합건설업 건설공사액 하락세 지속, 전문건설업은 업종별로 성장세 상이**

- 국내 공사액의 72.6%를 차지하는 건축공종은 192.3조원으로 전년대비 0.2%(-5.8조원) 하락
- 종합건설업의 건설공사액은 127.2조원으로 전년도인 130.9조원에 비해 2.9%(-3.8조원) 하락
- 전문건설업의 건설공사액은 166.5조원으로 전년도인 161.6조원에서 3.0%(4.9조원) 증가
 - 전문건설업종(설비, 유지관리, 전기/통신/소방 제외) 공사액 성장률은 0.4%로 전문업종 중 최하
 - 시설물유지관리(12.4%), 정보통신(7.8%), 전기(7.3%)가 전문건설업종 성장세 견인

공종별 국내공사액 추이



업종별 공사액 추이

(단위: 조원)

업종	건설공사액		증감액	증감률
	'18년	'19년		
종합건설업	130.9	127.2	-3.8	-2.9%
전문건설업	161.6	166.5	4.9	3.0%
전문*	85.4	85.8	0.4	0.4%
기계설비	20.8	21.3	0.5	2.6%
시설물유지관리	5.6	6.3	0.7	12.4%
전기	29.1	31.2	2.1	7.3%
정보통신	14.2	15.3	1.1	7.8%
소방	6.5	6.5	0.0	0.5%

*건설법 전문업종 중 기계설비, 가스시설, 난방시공, 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업종

건설 계약액은 0.4% 증가한 반면, 건설업체 수는 4.8%증가하며 건설업계 수익성 악화 우려

- 건설계약액은 국내 239조원, 해외 17조원으로 256조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0.4%(1조원) 증가
 - 국내 계약액은 전년대비 3.9%(0.9조원) 증가하였으나, 해외 계약액은 32.2%(-8조원) 하락
 - 수도권 계약액은 전년대비 10.2%(10.8조원) 증가하였으나, 수도권 이외는 1.4%(-1.8조원) 감소
 - 국내 계약액 중 건축공종은 1.6%(-2.6조원) 감소한 반면, 토목(27.9%), 조경(28.7%)은 증가
- 2019년 기준 건설업체 수는 91,848개로 전년대비 4.8%(4,171개사)증가하였음
 - 종합건설업체는 11,372개사로 전년대비 3.0% 증가, 전문건설업체는 80,476개사로 5.0% 증가
 - 수도권 건설업체는 28,138개사로 전년대비 4.6% 증가, 수도권 이외는 50,711개사로 4.5% 증가
- 건설업체의 과당 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공사원가 상승, 해외공사 발주물량 감소에 따른 대기업들의 내수시장 비중 확대는 국내 건설시장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임
 - 특히 계약액이 10.2% 하락한 수도권 이외 지역, 건축공종을 중심으로 부실업체 증가 예상
- 수익성 악화에 따른 부실공사와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분야는 저가발주를 지양하고 건설업체는 유동성확보를 중심으로 안정적 경영방침을 고수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

산업동향

3기 신도시 추진 현황과 사전 청약

권주안 연구위원
(jooankwon@ricon.re.kr)

3기 신도시 추진 현황

- 정부는 매매가격 상승으로 야기되는 주택시장 불안정성을 관리하기 위해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음. 대규모 택지개발과 3기 신도시 외에도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증대 목적으로 수요 억제 외의 공급 확대도 추진
 - 2018년 9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근간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필요한 택지 확보를 위해 2018년 9월 3.5만호 공급이 가능한 17곳 지구 개발을 발표하였음. 이어 동년 12월 15.5만호 공급이 가능한 41곳의 지구 개발을 발표하였으며, 이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외의 3기 신도시 일부가 포함되었음. 2019년 5월 마지막 3차로 5.8만호 공급이 가능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2곳을 추가하여 개발 계획을 발표했음
 -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의 3기 신도시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입지하고 있으며, GTX 등 광역교통망 건설을 통해 접근성을 제고시켜 서울에 집중되는 수요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추진되었음
- 3기 신도시 5곳은 모두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설계공모를 통해 도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지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토지보상절차 등의 후속절차를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음
 -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18.12월 개발 계획이 발표된 지구는 지구계획 수립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2021년) 5~8월 중 지구계획을 순차적으로 확정할 것임
 -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19.5월 발표 지구는 '21년 말 지구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9월부터 MP팀을 운영하여 추진할 예정임
 - 8월에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 등은 보상공고를 완료하였으며,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올 말부터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은 내년 상반기 보상공고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지난 5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된 하남·과천은 도로사업 실시설계 착수 등 후속절차에 착수하였음
 - 계획수립 중인 남양주·고양·인천·부천 등은 지자체 합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0년 내 교통대책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음. 적기에 교통사업이 완공되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후속절차도 추진되어야 함

3기 신도시 추진 현황

구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면적	1,134만㎡	649만㎡	335만㎡	813만㎡	343만㎡	
호수	6.6만호	3.2만호	1.7만호	3.8만호	2.0만호	
추진현황	지구지정	'19.10월	'19.10월	'19.10월	'20.3월	'20.5월
	설계공모	'20.3월	'20.3월	'20.3월	'20.8월	'20.8월
	보상공고	'20.8월	'20.8월	'20.8월	'21.上	'21.上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9.8.)

사전청약 계획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물량의 조기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본 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 시행한다고 발표함. 이 경우 사업 추진 프로세스는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의 순임
- 청약공고는 아파트 블록(단지)별로 순차 진행하며, 입지조건, 주택규모, 세대수, 추정분양가격, 설계도 등의 주택 정보와 본 청약시기, 입주예정월 등 추가 정보를 제공. 단 실제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에 맞추어 본 청약 시 제공함. 전체 공급 물량의 85%는 신혼부부, 최초주택구입자 등 대상의 특별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는 납입금액 크기의 순으로 배정될 예정임
- 사전청약 세부 사항
 -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한 기준(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을 적용하고,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당첨자 선정은 인터넷·현장접수를 통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당첨자는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할 수 없음(단, 본 청약은 가능)
 - 입주 여부는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여 청약의사,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하여 확정

평가 및 전망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토지개발과 조기 주택공급은 수도권에 집중된 입지조건을 감안한다면 수요 분산, 흡수로 시장 심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조기 공급을 위한 사전청약이 무리 없이 진행되기 위해선 지구지정, 설계공모, 보상 등의 사업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전문건설 업종에 따라 수도권지역에서 2021년 하반기 이후 건축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광역교통망 추진으로 다양한 전문건설 수요도 기대됨

정부 및 업계동향

1. 정부동향

-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한국농촌계획 및 한국농촌건축대전 우수작” 선정(9. 3)**
 -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촌건축학회,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2020년 제18회 한국농촌계획대전과 제15회 한국농촌건축대전의 우수작을 선정
 - * 농식품부는 농촌 계획과 농촌 건축 분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농촌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2003년부터 농촌계획대전을, 2006부터 농촌건축대전을 개최하고 있음. 제18회 한국농촌계획대전은 ‘미래를 담는 농촌’을 주제/제15회 한국농촌건축대전은 ‘농촌유희시설의 리모델링’이 주제

- **기획재정부,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9. 3)**
 - (예산편성 기본방향) ①빠르고 강한 경제반등을 위해 「기회복을 견인하는 예산」, ②선도형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는 「뉴딜투자의 물꼬를 트는 예산」, ③정부 국정과제의 이행 가속화와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국정성과를 체감하는 예산」
 - (재정 총량) ▲'21년 총수입은 483.0조원(전년대비 +1.2조원, +0.3%) ▲'21년 총지출은 555.8조원임(전년대비 +43.5조원, +8.5%) ▲'21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5.4%로 전년대비 △1.9%p 악화, 국가채무는 46.7%로 전년대비 6.9%p 증가
 - (분야별 자원배분) ▲(산업·환경·R&D) 디지털·그린 뉴딜 핵심분야 → +12.3~22.9% 증가 ▲(복지·일자리)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 +10.7% 증가 ▲(SOC) SOC 디지털화·안전투자 중심으로 확대 → +11.9% 증가 ▲(국방) 스마트강군 구축, 군 사기진작 투자를 확대 → +5.5% 증가
 -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21년 예산 21.3조원을 반영하고 일자리 36만개 창출을 목표 ▲10대 대표과제와 안전망 강화에 80%(17.0조원) 집중 ▲디지털뉴딜 7.9조원, 그린뉴딜 8.0조원, 안전망 강화에 5.4조원 투자

- **기획재정부, “내년 R&D투자 27조원 편성” 발표(9. 4)**
 - '21년도 R&D 예산을 '20년 24.2조원 보다 12.3% 증액한 27.2조원으로 편성. R&D 예산 증가율은 '20년 18.0%, '21년 12.3%로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유지. 확대된 R&D 예산은 한국판 뉴딜, 감염병, 소부장, BIG3, 기초 원천R&D, 인재양성의 6개 분야에 13.2조원 투자될 계획임

- **정부, “한국판 뉴딜 자문단” 위촉(9. 8)**
 -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및 안전망 강화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
 - * 디지털 뉴딜 자문단으로 AI, 빅데이터, 5G, 비대면, 클라우드 등의 분야에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문 위원 16명을 위촉
 - * 그린뉴딜 분과에는 기후변화, 에너지, 미래차, 녹색기술 등에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문위원 18명을 위촉

- **국토교통부,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0” 일환 “BIM 라이브” 개최(9. 9)**
 - 9. 9(수) ~ 11(금), 일산 킨텍스
 - 국토부는 '25년 전면 BIM 설계 목표, BIM 도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개최됨. 총 6개팀 참가, 현장에서 직접 3D 설계모델 작성
 - * 스마트건설 챌린지 : BIM, 3D 프린팅, 토공자동화, 유지관리, 건설안전, UCC 등 6개 스마트 건설기술 분야별 기술력 현장시연 및 경연(6.29 ~ 11.27)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9. 15)**
 - ①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을 세분화함 ②피해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진시정 감경 인정 및 감경률을 확대함 ③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등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9. 16 입법예고” 업종체계 개편 본격화(9. 16)**
 - 종합-전문업체 간 공정경쟁을 위한 업종 통폐합
 - * 현 28개 전문건설업은 '22년부터 14개로 통합, 상호시장 진출은 직접 시공이 원칙, 컨소시엄은 '24년부터 허용
 - 발주자 편익 강화를 위한 주력분야 제도 도입 * 현 28개로 운영 후, '22년부터 추가 세분화 방침
 -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확보를 위한 유지보수 시장 전문성 강화
 - *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업종 전환,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23년까지 전문건설 대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토목/건축)으로 전환가능, '24년부터는 전문 대업종 1개로 자동전환
 - 업종개편 과정에서 영세 사업자 보호 *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 도입

- **기획재정부, “그린뉴딜 국제 컨퍼런스” 녹색기후기금(GCF)과 공동개최(9. 17)**
 -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와 그 이후의 그린뉴딜 정책방향’을 주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EU대표부 대사 등 주한외교단과 이집트, 아르메니아 등을 비롯한 147개 GCF 회원국 정부기관, ADB, UNDP 등 국제기구와 블룸버그, BlackRock 등 녹색경제 유관기관에서 1,000명 이상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
 - (세션1) 세계 녹색회복정책 동향 및 녹색경제 전망
 - * 개도국의 녹색회복 정책 동향, 세계 녹색회복 정책 동향, 세계 녹색경제 동향 및 전망
 - (세션2) 대한민국 그린뉴딜 정책 및 발전방향
 - *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방향(허창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그린뉴딜 발전방향 제언(정태용 연세대 교수)

- **국토교통부, “2020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결과 발표(9. 17)**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20.4~’20.8)한 결과 발표
 - 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일반부문(광역시/기초)과 특별부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 (일반부문) 일반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의 전문성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광역자치단체(17개)의 경우 세종특별시(81.63점), 서울특별시(71.66점), 경상남도(66.92점) 순으로 건축행정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 (특별부문) 광역과 기초지자체별로 “2019년 건축행정 혁신 및 지자체 현장 밀착형 서비스 개선사례”를 공모한 결과 40개 사례(광역 14, 기초 26)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우수한 2곳(전라북도, 경기도 이천시)을 선정



2. 학계동향

- **건설산업연구원, 「해외 사례를 통한 건설현장 청년층 교육·훈련 강화 방안」 포커스 발간(9. 3)**
 - ▶ 현장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각 직종에서 필요한 기술을 분석하고 표준화하여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 ▶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경력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 (가칭)훈련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훈련 종료 후에도 건설업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경력 설계에 도움을 주고, 21년 상반기 도입되는 “통합경력관리시스템”과 연계방안 모색 ▶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현장 중심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인센티브 방안 마련 및 훈련생에 대해서도 향후 도입될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모색 필요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월간 스마트 건설리포트 02호」 발간**
 - 스마트건설기술과 관련된 정부 정책과 이슈, 국민과 산업계가 함께 공유 가능한 기술, 유망한 스마트건설기업 소식 등 다양한 정보가 수록된 소식지
 - * 기본: 스마트건설 주요이슈, 이달의 스마트건설기술 기업, 스마트건설지원센터 NEWS, 01호_BIM 플랫폼 시장, 02호_모듈러 건축

- **한국도시설계학회, 「공공디자인으로 대한민국 바꾸기」 출판기념 북콘서트 개최(9. 26)**
 - 9. 26(토), 10시, 중앙대학교 R&D센터 지하1층(온라인_줌)
 - 한국도시설계학회 공공디자인연구위원회
 - (기조강연)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이제선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
 - * 가로재생 디자인(고은정 수원시 도시디자인 기획관)
 - *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전략(이현성 에스이디자인그룹 대표)

3. 업계동향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대금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주)” 제재**
 - (법 위반 내용) 현대중공업이 협력 업체가 납품한 화력 발전소용 엔진 실린더 헤드의 하도급 대금 2억 5,563만 원 및 지연이자(약 2억 원)를 지급하지 않음
 - (적용 법조·조치 내용) ▲(조치 내용)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주)에 재발방지 명령 및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2억 5,563만 원과 지연이자(약 2억 원)의 지급명령 부과를 결정

- **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89개사 최종 선정(9. 3)**
 - 강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89개사 최종 선정, 선정기업에 KOTRA 수출전문위원의 1:1 컨설팅, 시장조사, 홍보, 현지 에이전트를 통한 신규시장 발굴 등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수출 바우처 발급

- **전문건설공제조합,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사업이행보증·협약이행보증 등 신상품 출시(9. 16)**
 - 조합원사의 종합건설사업 진출지원을 위한 보증신상품 출시
 - *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조합원사가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지급의무 보증, 도급공사 현장 단위로 근보증을 제공해 현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사업이행보증: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사업이행보증금 납부의무 보증
 - * 협약이행보증: 복합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부담하는 협약이행보증금 납부의무 보증

- **대한전문건설신문 · 법무법인 지평, 「건설 · 부동산 이야기」 책자 발간(9. 17)**
 - 건설 관련 분쟁 예방과 실무에 필요한 법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년5개월간 본지에 연재한 기고를 간추리고 다듬어 책자로 발간함
 - * 공사계약에서부터 건설·노동정책과 원하도급 관계 등 건설산업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건들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해석을 담음